

제438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8월14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 가. 교육부 소관

상정된 안건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1
 - 가. 교육부 소관
 -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2
 - 가. 교육부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희정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국회방송 유튜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양당 간사 간 합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

다. 간사 합의가 완료되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소위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는 법정 심사 기일인 8월 31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바 꼭 오늘 회의 중에라도 양당 간사께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체 소위원회 구성이 힘드시다면 예산결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법정 기일에 차질 없도록 우리 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소위 심사자료 작성을 위해서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꼭 산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9079)

가. 교육부 소관

나.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9080)

가. 교육부 소관

(10시14분)

○위원장 김희정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부 결산을 심사하는 날입니다. 정부의 살림살이가 잘 이루어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는지, 목표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최고진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결산 등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고진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첫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 19조 7759억 원, 수납액 19조 740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8%입니다.

둘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17조 1351억 원, 집행액 116조 8452억 원, 이월액 808억 원, 불용액 2090억 원으로 99.8% 집행을 하였습니다.

결산 개요 4쪽입니다.

셋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일반회계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출을 위해 8288억 원을 배정하고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 있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5972억 원을 조달하여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 자금 융자 및 행복기숙사사업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11조 8384억 원을 조달하여 연금급여, 생활자금 대여 등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교육부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나오셔서 결산에 관해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결산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 책자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 3쪽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유류비 등 환수로 인한 징수결정액 5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액 111억 9100만 원 중 9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9억 7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2.1%입니다.

예비비와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국가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을 경청하여 우리 위원회의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결산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수석전문위원께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주요 사항 위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사업 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은 바우처를 지급받고도 사용하지 않은 인원이 많아 실효행률이 80.4%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미사용률이 각각 23%, 28%로 높고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용실적을 조기에 점검하고 취약층의 이용 제약 요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 사업은 모집인원 대비 등록률이 25년 64.9%로 하락하였고 2학년 과정으로 진입하는 비율 또한 하락하여 중도에 이탈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지표가 저조한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은 사업 규모의 변경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있으며 특히 기존에 교부된 이월예산의 집행으로 25년에는 4개 대학에 교부된 예산 183억 원이 전혀 집행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기반이 제때 구축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법령이나 예산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 사업은 교육시설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42개 학교 중 24%에 해당하는 10개교가 법정기한 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학교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5분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훈 위원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교육부장관님께 동북아역사재단의 이사장을 직무정지하고 해임을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쭙어봤던 것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료 요구도 제가 여러 개 했었고요. 그때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장께서 교육부장관께 이리이러한 취지로 자료 요구를 해 달라는 제 요구를 전달하셨고 거기에 동의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내온 것을 보니까 핵심 내용은 다 빠졌어요. 저한테 자료를 교육부에서 보내 주신 내용을 보셨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요구한 대로 저희 제출했다고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 내용을 보고 오셨어야지요. 뭘 보고했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그러면 또 좋은 소리 들으시겠어요?

지금 핵심 내용이 다 빠졌어요. 첫 번째는 일단 저는 동북아역사재단이 뉴라이트적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것에 저도 그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과 관계없이 산하기관장을 해임할 때는 충분히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을 국민들과 그리고 국회가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정훈 위원 그리고 그것을 국회가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자료를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처음에 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감사할 거리가 안 된다는 취지의 얘기가 있어서 동북아역사대응팀에서 감사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었기 때문에 그 경위에 대해서 여쭙어본 거였고.

그리고 저희 지난 질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산을 전용했다는 부분 그것을 횡령으로 보고 그 부분을 핵심적인 직무정지 사유, 해임 사유로 거론이 됐던 건데 그 부분이 예산 규정과 맞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 반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있어야지만 국회에서도 볼 때 이분이 충분히 잘못해서 직무정지가 되고 해임될 만한 일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해임을 추진하시게 될 경우에 이게 또 다른 큰 논란으로 변질 수 있다는 것 장관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제출할 때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박정훈 위원** 행정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그것은 가처분, 직무정지를 풀어 달라는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 왜…… 산하기관장을 해임까지 시킬 정도의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해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 요청을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정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유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다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박정훈 위원** 다툼이라는 게 가처분이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특히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훈 위원**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서 징계하고 해임까지 하시려고 그래 요? 그 정도 자신 없으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동북아재단 징계 대상인 이사장님에게 오히려 누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훈 위원** 지금 그분 핑계 대는 거예요? 그분한테 누가 될 수 있다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정……

○**박정훈 위원** 이미 어제 제가 다, 지난 회의 때 다 규정에 맞게 돼 있다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으면 교육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이런 이유가 더 있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재판 중이니까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지금.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정훈 위원** 그러다 김은경 장관이 감옥 간 거예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런데 위원님, 실제로 첫 번째 감사관실에서 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특히……

○**박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 경위를 정확히 알려 달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면……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정훈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감사관실에서 그런 반응이 있었다고 하니 그 정확한 경위를 알려 달라는 거잖아요.

제 요구가 부당합니까? 그런데 안 알려 주세요, 왜? 그게 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아닙니다.

그다음에 감사관실에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바는 전혀 없고 그때 당시 국회를 비롯해서……

○**박정훈 위원**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정훈 위원** 이 사안은 우리가 정식으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리 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해 달라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두 차례나 여쭙었는데

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이후에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셔서 교육부도 오해받을 일이 없고 또 이 문제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문제인 정부 때 찍어 내기와 비슷한 게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간략하게 보충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사안 조사를 부처에서 하게 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사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에 있었던 정당한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근거인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나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정훈 위원** 그러면 예산 규정, 돈을 전용해서 써서 그게 횡령이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안 하고 계셨어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그것 외에 추가된 안이 있어서 그것까지 해서 징계안을 올렸고……

○**박정훈 위원** 그러면 추가된 안이 뭔지도 설명을 하셔야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위원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재심청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심청구 기간이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사장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훈 위원** 그러면 이 재판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그 재판 기간 내내 절대 이 얘기는 교육위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공개적으로는 적어도 재판이, 그러니까 재심청구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안 받아들여지거나 하는 것은 재판하고 달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답변이나 서류로 온 것 보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소송 중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답변이라고 보내오셨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 보면 국회에는 답변을 못 하고 사법부에는 답변을 하겠다라는 취지로밖에 안 들립니다. 입법부에 공개할 자료와 사법부에 공개할 자료가 달리 있습니까? 만약에 본인에게 더 누가 될 자료라고 생각하면, 국회 자료제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피해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을 하거나 또는 요청하신 위원님에게 비공개로, 대외비로 설정을 해서 바로 회람시키고 걸어 가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국회에 제출 방식이 있으니 여야 간사님에게 상의를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박정훈 위원님이 원하는 자

료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방안 찾아서 특히 박정훈 위원님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박정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박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최고진 장관님, 어제도 제가 여쭙어봤는데요. 감사원이 그동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실태에 대한 세 차례의 감사가 있었는데 한 번은 박근혜정부 때, 한 번은 문재인 정부 때, 한 번은 윤석열 정부 때 각각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박범계 위원** 정부의 성격을 달리하는 새 정부에서 연속적으로 예산의 과다 편성, 집행의 부적정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건전성 재고 실태조사 또 윤석열 때는 방만 재정 문제점 집중 점검, 이런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점검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한 부분 중에 장관님께서 다소 보충설명을 하신 했는데 어찌 됐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엄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는 동의하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동의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경향신문 단독 기사가 났는데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그동안에 내국세의 20.79% 그렇게 고정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소 수정해서 어쨌든 초과세수에 따른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을 만들어서 차액을, 즉 내국세의 20.79%에 안 되는 그 차액 부분을 보전한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고요.

○**박범계 위원** 대충 취지는 그것하고……

○**교육부장관 최고진** 최근에 보도되는 여러 언론……

○**박범계 위원** 취지는 그와 유사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런데 매우 예민한 문제여 가지고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범계 위원** 확인해 주실 수 없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 기사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교육계정을 통해서 보전을 한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이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초중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또 고등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교육의 이념상 둘 다 조화롭게 다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그동안의 투자가 부족했으면 부족한 대로 또 메워야 되고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이 소외됐으면 그 부분은 또 보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장관님께서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제가 한 열두 꼭지 중에 여섯 꼭지 정도가 고등교육에 있어서 특히 대학을 첨단산업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서 우리 미래전략산업의 투자와 관련해서 대학을 전초기지로 만드는 그러한 테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정이 만들어지면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상당 부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맞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동의합니다.

○**박범계 위원**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결산이니까요.

RISE가 있잖아요, RISE 사업?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범계 위원** 저는 지역에서 등산할 때 RISE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교수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라 교육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옛날에 한 번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RISE 사업이라는 것과 지금 글로벌대학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박범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서로 이론적으로 상충되는 것 같아요. 즉 RISE 제도라는 것은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혁신경제, 혁신경제에 대해서 교육부가 잘 알지 못하니까 더 전문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RISE 사업을 통해서 일종의 대학이 혁신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그런 전제인데 글로벌 사업도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글로벌 사업은 교육부가 직접 주관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어보는 핵심은 결국은 어제 업무보고의 연장선상에서 교육부가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국책 지도 이념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지방의 사정들까지 다 알아야 되고 특히 국가전략산업의 투자와 관련된 인재 양성에 대해서 매우 전문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양과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것 전제로 하는 얘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봐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에도 그것이 일정하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2025년도까지 그 전에 있었던 RISE사업과 글로벌사업이 일정하게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된 지역대학을 양성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한이 있는 것과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오히려 대학의 권한이 너무, 자율성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업을 사실은 26년도에는 합치고 가면서 연계성은 유지하되 사업추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하는 체계를 다시 27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라이스가 아니고 RISE인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RISE입니다. R, I, S, E. 그렇습니다.

○**박범계 위원** RISE사업이든 글로벌사업이든 어찌 됐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다는

발상의 전제, 즉 교육부가 지방의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방교육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지방혁신경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생각이 전제가 깔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문성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정** 박범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차정인 국교위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민참여위원회는 법률상 반드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법정기구입니다. 맞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2025 국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과연 국교위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제1기 국민참여위원은 499명이었습니다. 위원장님 포함하면 500명이겠지요. 2025년 모두 여덟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당 평균 참석자가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한 24% 정도 되는데요. 499명 가운데 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무려 305명, 한 61%가 넘지요. 총 여덟 차례 열린 회의에 세 번 이하로 참석한 이들까지 합하면 37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74%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명에 가까운 위원을 위촉해 놓고 10명 중에 6명은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된 것이라고 또는 제대로 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백승아 위원** 당당하게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하시면.....

특히나 교육정책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청년 위원이 81명인데요. 이 가운데 53명, 그러니까 따져 보면 65% 넘는 분들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정책 당사자들인데.

살펴보니까 국교위 회의는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과 청년들은 학업 때문에 또 직장인들은 생업 때문에 참여하기가 어렵겠지요. 또 장소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 위원들은 출석이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국교위가 참여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회의를 반복해서 열고 참석률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참여위원회를 그냥 구색만 갖추어 놓고, 외형적으로만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조차 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을 합니다.

○**백승아 위원** 또 한 가지 짚어 보면요 제1기 국민참여위원회 임기는 2025년 6월 22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는 2026년 4월 23일에야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개월 동안 법률상 두도록 한 위원회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공백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운영 부실 그리고 구성 지연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교위의 존재 이유가 뭐니까? 사회적 합의를 이루라고 한 것인데 거기에는 당연히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10개월 동안 국민참여위원회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국교위가 이렇게 국민 의견 수렴이라는 법률상 책무를 지속적으로 소홀히 했던 것은 그동안 국교위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제가 취임한 이후에 한 조치는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해서 당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1기 평균은 32.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2.1%면 500명 중에……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참여율이 평균 24%고 10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이 취임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임기가 다 한 이후에도 법정기구를 10개월 동안이나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 노력 부족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의로 끝낼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교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1기 국민참여위원회의 부실 운영 경위 조사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요구에 대해서 저는 겸허하게 수용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한 국민참여위원회 평일 낮 중심의 회의 방식 개선해야 됩니다. 온라인·야간·주말 회의 확대 필요하고요. 1기 참여자들이 2기 활동을 위해 제안한 권역별 모임 또 소그룹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재고하셔서, 마련하셔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기부터 임기 종료 전에 다음 위원회 구성 절차에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임 임기 종료 전에 후임 위촉을 완료하도록 관리계획 마련하십시오.

저는 국교위가 법률상 이렇게 책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법정기구 공백까지 방치한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로 법률상……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를 소홀히 해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왔던 이런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위원님, 중요한 지적사항이고 그 점에 대해서 국교위가 개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을,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10개월간 공백 중에서 4개월은 국민참여위원회 모집 기간이었고요. 죄송하지만 맨 처

음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당장 국민참여위원회 제도개선 정책연구를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간 했고요. 그 이후에 1월부터 바로 국민참여위원회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모집 구성 의결부터 시작해서 금년 4월 23일 날 발대식을 마쳤는데 그러고도 약 몇 개월간 공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앞으로 3기를 출범시킬 때는 공백 없이 발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운영 성과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개선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참여율이 낮은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일 저녁과 주말 등 이용해서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을 더 순회하면서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를 봐서 지금은 58.9%까지 올랐습니다.

○백승아 위원 58.9%요?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좀 많이, 그러니까 500명 중에 약 60%가 300명입니다. 한 300명 가까이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기에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백승아 위원 연구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치도 올리려고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요. 국교위가 위원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에는 없었나요? 지금 10개월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내가 취임한 이후에 석 달간 정책연구 했고 그다음에 끝난 후에는 마련했고 그것들은 저는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그전에는……

○백승아 위원 국민참여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국교위는 존재 자체가 의심받는 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국민참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10개월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점은 국교위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취임한 이후에는 노력을 했다는 점들은 제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겠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하셔서 참여율을 58.9%가 아니라 80%, 90%까지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고 왜 이렇게 됐는지 경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국민참여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효과적인 상시 기구기 때문에 이 운영의 효율성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3개월간 제도개선 요구하셨던 결과 지금 회의 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음은 존경하는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부산진구갑 정성국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분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분이라 했지만 저조차도 국회에서 제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지금 박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로, 징계 사유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해임의 요건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라는 절차는요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떤 힘이나 권력으로 그런 부분을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이 원칙에 벗어났을 때, 상식에 벗어났을 때는 반드시 뒤에 후과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박정훈 위원이 제기하신 그 부분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장관님께서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말씀하신 대로 공정성, 객관성,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가장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부족 문제를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인건비 부족을…… 연례적으로 전용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지출이 되어 버리거든요, 장관님.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인건비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 불가능하게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교직원 수라든지 호봉 이런 걸 토대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사전 추계가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왜 매년 본예산 편성이 충분치 않는 것인지.

결국은 인건비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당초에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던 예산을 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해당 사업의 추진도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개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편성액을 부족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부족하게 하는 까닭은 그 전년도에 영아의 증가 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예상보다 보육시설의, 특히 공립 보육시설의 영아 수가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해서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그 추계를 맞춰 가면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성국 위원** 장관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례적인 전용 이게 문제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런데 거의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게 한 번, 두 번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좀 하지요. 그런데 연례적인 전용이라는 자체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는 다시 또 내년에도 연례적인 전용이다 말이 안 나오도록 잘 좀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평생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저는 이 부분의 다른 부분을 좀 짚고 싶어요.

1인당 기본 지원액이 35만 원이고 그리고 우수 이용자는 70만 원. 이용자 수가 2025년 기준으로 10만 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인당 기본 지원액 35만 원이 장관님, 언제 처음 정해졌냐면 2018년입니다.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8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러면 바우처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지급도 해야 되지만 평생교육바우처를 받았을 때 이 35만 원의 가치가 8년 동안 그때 당시에 사용하던 돈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데 이거 정말 이용을 잘하는 많은 분들이 질 높은 교육을, 공부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정말 예산 규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이것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그걸 보람 있게 쓰실 수 있도록 더 관리하는 것도 똑같이 필요한데 말씀 주신 이분들에 대한 정말 8년 동안 정해져 있는 이거는 물가나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반드시 예산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국 위원** 재밌는 이야기로 명절에 용돈 주는 것도 인플레이션이 돼 가지고 요즘 초등학생들한테도 얼마를 주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이 물가의 부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8년 전의 지원 돈과 지금 돈이 똑같다, 이 부분은 지금은 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것 같으면요 좀 확실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느낌, 특히 우리가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상위계층 등에게 그런 혜택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연간 35만 원부터 여러 기준에 따라서 70만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상한선처럼 되어 있는 70만 원을 사실상 기본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꼭 됐으면 좋겠고 더군다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사실은 7 대 3으로 지방자치와 같이 연동해서 하게 된 게 첫째라서 이용률도 많이 줄었는데 이용률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장관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정성국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중에 기본금이 70만 원 되게 하려면 35만 원 사용 안 되는 비율이 약 20%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35만 원도 소진 못 하고 있는 비율이 20%나 가면서 70만 원을 기본으로 해 달라고 국회에다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 같이 가지고 오셔서 예산심의 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정성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님, 정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서 이렇게 질의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병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년주택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성숙 총리께서 취임하고 첫 주말 일정으로 신촌 원룸촌하고 홍제동 행복기숙사 찾으신 것 같아요. 그건 청년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행복기숙사 이런 것 잘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 좋겠다, 희망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이것 잘되고 있습니까, 행복기숙사?

○**교육부장관 최고진** 올해 개원했었던 한체대에 있는 곳을 개원식 때 저도 가 봤는데요. 정말 여러 대학 친구들이 아주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게 공간도 잘 구성되고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기 위한 공사를, 2027년도에 문을 여는 곳 이, 지금 인천과 부천대와 인하대 그리고 아주대에 2027년도 개원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위원** 이것을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짚고 싶은데 학생들이 정말 어려운 게 서울 주요 10개 대학 평균 월세가 63만 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7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1년 사이에 월세가 7.7%, 관리비는 10.9%가 올랐고요. 지방 국립대 연간 평균 등록금이 416만 원이라고 하는데 월세로만 등록금의 2배를 지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가 등록금보다 월세가 훨씬 무섭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끼는 거겠지요.

그런데 지난해 대학 기숙사 평균 수용률을 보니까요 20% 되고 또 5명 중 4명은 학교 밖에서 방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비는 오르고 기숙사 수용률은 낮은 상황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행복기숙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더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홍제동 행복기숙사가 33만 원이면 그리고 식사비 포함 45만 원이면 거의 한 반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기대가 크고요.

그런데 최근 3년간 행복기숙사 세 곳을 중단했는데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건립 부지 문제 등으로 사업들이 중단이 됐습니다. 정부가 나섰는데 오히려, 아까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하는데 필요한 기숙사 공급이 오히려 줄줄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무산이 됐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일단 시작한 뒤에 물가가 상승한 것에 따라서 공사비가 막 오르고 또 뒤늦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중단됐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한병도 위원** 그러면 그곳은 아예 그냥 중단이 돼 버린 건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 타당성이나 계획 같은 것을 더 면밀하게 살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병도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앞에 서두에 쪽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고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사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업 진행을 하는 예산들을 보니까 예산을 재배치하잖아요. 재배치를 하는데 한 예를 들어 보면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24억 원인가 돈을 빼서 추가로 재배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미 한 93억 원 미집행되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합치면 미집행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때는 그게 사실은 25년 1월·2월 방학 때 공사를 해야 돼서 그렇게 했었고 추가해서 방학이 끝나는 2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한병도 위원** 다 집행이 됐나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한병도 위원** 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대학들 미집행률이 상당히, 제가 대학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31.6%, 19.0% 되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대학들이 있는데 이것 집행률을

높일 방안도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한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최교진 장관님, 국정과제로 교육부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이용해서 지난 12월부터 전국 14개 시도에 총 100개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지역격차 해소, 공교육 강화에 도움이 되지요.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업이 일부 지역의 자체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포천이나 예천에서 만족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봐 주시지요. PPT 보시면 포천과 예천이 거의 94%, 한 96%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체 만족도 조사한 것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학습공간, 시설 편의성, 프로그램, 학습코디 지원, 콘텐츠 활용, 성적 변화,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역 학생들의 학습 변화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 그 실질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사업을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그게 작년 9월까지 48개 있었고 올해 52군데를 또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대해야 되겠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확대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그래서 올해 사업 예산으로는 104억인데요. 교육부가 2027년도에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104억보다 더 깎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의지도 그러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과가 확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대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해 12월부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싹을 피우고 있는 단계고 가시적으로 어떤 열매가 확인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격차 해소라든지 공교육의 강화 이런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포천이나 예천 같은 데는 사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지역구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만족도가 많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대 구조개선 관련인데요. 화면 보시지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5년 사학진흥재단의 사업비 결산인데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경영을 자문하는 것, 이

를테면 컨설팅인 거지요. 그리고 구조개선법 시행 전에 선제적인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15일부터 2035년까지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립대학 구조개선하고 사립대학 관리 업무가 훨씬 확대될 것입니다. 이게 폐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복잡하게 엉키게 되는 것이지요. 폐교되고 나서 되게 술렁이고 시끄럽고 재단에서는 손을 뗄 것인데 그러면 그 뒤에 학적 업무, 여러 가지 운영 지원 업무, 굉장히 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냐면 결국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예요, 문을 닫은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탁한 사학진흥재단에서 이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인데 제가 광양보건대를 한번 살펴보니 8월 말에 폐교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산 선고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임시운영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운영의 불안정성이 너무너무 큰 상황이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술렁이고 되게 질서가 없어지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것이 좋은 뜻으로 어떤 면에서는 사학의 재정과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한 것인데 구조개선을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교육부는 살펴볼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학진흥재단이 담당하거나 지원해야 될 업무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확대된 역할에 맞게 조직이나 인력, 전문성, 예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충분하게 점검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법 시행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업무 그리고 재정수요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을 담은 조직·인력·전문성 확보 방안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는지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8월 15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전담하고 있는 사학진흥재단의 주요 기능에 그동안에 사학의 교육환경기금 조성과 융자 업무만 되어 있던 것을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더 주요한 기능으로 집어넣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내년도에 8명 증원 예정인데 더 많이 증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증원했고 그리고 전체 조직 구성을 구조개선전략부, 잔여재산처리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운영지원부, 자진폐지컨설팅실, 지자체개발지원실 등 10개 부서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조개선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 새로 시작되는 2027년도 예산을 올해 53억 원에서 84억 원으로 제출해서 기획예산처와 같이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자기주도학습센터가 대도시 지역보다도 지금 특히 약간 지방 지역에서 굉장히 반응도 좋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에서 함께해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세우면 교육부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이런 구조인데 교육부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속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2027년 12월까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기관 EBS로 되어 있는데 EBS와 함께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가 어쨌든 사업구조를 다시 재설계해서 27년 이후에도 적어도 문을 연 100개의 지역이 지속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더 필요한 지역에 추가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1년 동안 연구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코디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게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건비가 고민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으로 정규화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 같은데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 기준에 보면 사업의 성격상 인건비에 관한 것이 반드시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것까지 다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사립학교 구조개선은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영 위원 장관님, 글로컬대학 목표가 뭔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죄송합니다만 우리 차관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주영 위원 글로컬대학이 이전에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에서 인센티브 형태로 들어가 있었지요. 그리고 라이즈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앵커(anchor)라고 해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글로컬대학의 목표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을 또 외국인 학생들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재정 소요도 아마 총 재정으로는 한 3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라이즈 전체도 지난 한 3년간 6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굉장히 중점을 두고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가 목표가 있으면, 목표는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정주가 될 수도 있고요. 국가 고등교육의 향상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럴 수는 있는데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관리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그리고 라이즈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지침도 없고 통계도 없고 거기에 대한 항목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중도 탈락률이 라든가 국가별로 학생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지역에 정주하는지 혹은 한

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자료는 있을 텐데요.

○**이주영 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청했는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하셨는데 전부 다 ‘별도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 별도 통계·집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개별 유학생의 중도 탈락 사유에 대한 사업비 환수 규정도 별도로 없다’ 저희가 이미 없다고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국가에서 왜 외국 장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지에 대해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하겠다는 국가의 방향성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방향성이 있고 그것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외국인 학생들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내국인 관련해서도 현금성 지원은 가능하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겠다고 보도자료 내신 적이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에 등록금에 생활비에 기숙사까지 지원받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의 중도이탈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

○**이주영 위원** 자료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평균 거의 10%에 육박하고요 많은 곳은 절반이 중도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전혀 없지요. 여기에 환수를 못 해서 낭비되는, 사실상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외국인을 데려다가 교육시키다가 이들이 중도 탈락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데 낭비되는 게 지금 제일 많은 게 중국 이랑 베트남 유학생들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3만 명 이상, 베트남이 2만 명 이상이 있는데 전체 추정액의 한 55%가 이 양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한 나라에서만 한 100억 정도가 낭비가 발생하고 있고요. 전체에서도 400억에서 많게는 500억까지도 버려지고 있다고 지금 조사…… 조사는 아니지요. 통계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국적별로 중도탈락률 원자료도 없어요. 사유도 없어요. 그러면 졸업생 관리는 되고 있느냐? 졸업생 관리도 지금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세요, 장관님? 없지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나라는, 미국 폴브라이트 장학생 어떻게 관리합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뽑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외교 자산을 만들겠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산학 그리고 국가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EU 같은 경우도 고등교육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것 운영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여기에는 앨럼나이(alumni)를 계속 추적한다든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든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도, 시스템 혹은 이런 네트워크 우리나라에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이주영 위원** 없지 않을 것 같다고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고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제가 이것 성과관리팀에서 직접 받은 자료인데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데……

○교육부장관 최고진 죄송합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질의 끝나시고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취지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저희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로는 유치 실적까지만 성과지표지 이 학생들이 지역에 혹은 대한민국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교육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지어 지금 장관님이 파악이 안 되고 계신다는 게 제일 문제예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담당 국에서는 일정하게 그 대처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건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제대로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따라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위원님, 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분명히 여쭙보고 싶은 게 글로벌대학사업이 있고 저희 국제교육기획관 업무에서 외국인 유학생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폴브라이트나 이런 부분의 정책하고 비슷한 거는 GKS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다 관리가 되고요.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도 대학별로 중도 탈락률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이주영 위원 그런데 왜 교육부에서는 자료를 못 주시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글로벌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글로벌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제가 이 폴브라이트를 얘기한 거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스트나 에라스무스도 다 똑같이 언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국내 학생들이 우리 세금으로 공부하는 거는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들을 어떤 형태로든 데리고 들어와서 관리하려면 이렇게 맥시멈 50%까지 이탈률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환수도 못 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어떤 네트워크로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 있으셔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의심할 여지없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 경력에 있어서도, 취업에 있어서도 굉장한 특혜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돈으로 교육을 받은 이후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리는 것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아까 제가 예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중간 이탈한 것으로 대충 비례로 추계를 해도 이 정도가 낭비가 된다,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 거지 따로 관리해서 이쪽에서 몰랐을 거라는 게 교육부의 답변이면 안 되지요, 그게 장관님이건 주무부처가 됐건.

지금 제 질의의 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도 이탈률 이런 것들이 대학별로 다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주영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정리해서, 글로컬대학에서 나온 것과 국비 유학생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정리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위원님께 사과 말씀 포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지원 외국 학생들 대상의 장학금 지원 사업, GKS 사업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그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드리고요. 필요하신 자료 제대로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을 받으면서 글로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줄 알고 있다가 제가 그랬듯이…… 이 GKS 사업에 관한 이 질문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위원장님, 저 20초만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희정** 예.

○**이주영 위원**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글로컬대학과 그 외의 장학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외국인 학생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다시 하셔서 통합적인 내용을 교육부에서 전체 덩어리로 알고 계셔야 돼요. 나뉘어 있으니까 나누어서 관리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생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결산자료에서 보면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한 것 중에 4페이지 보면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내용하고 또 뒤에도 보면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실제로 35%,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 또 국립대학 실습기자재 확충도 그렇고 또 그 뒤에 보면 국립부설학교 시설확충도 전체 42개 중에서 10개교는 법정기한 내 안전인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 또 스프링쿨러 10개 중 9개가 안 되고 있다. 작년에 국감 때도 제가 이거를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전하고 또 화재에 관련된 거는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교육부 예산이 정말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교육청에 지급한 것을 예산집행을 교육부에서는 한 걸로 보고를 하니까 집행률이 엄

청 높게 나오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또 그다음 단계로, 각 학교라든가 어린이집, 유치원이 집행하는 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다 돈을 줬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것으로, 이게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집행률은 낮게 나오고.

어쨌든 타 부처에서 교육부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고 뭔가 집행이나 불용이 많다고 계속 지적을 하면서 교육재정교부금의 연동제 20.79%를 없애는 논리를 보면, 이 결산자료에도 보면 상당히 허접하고 빈틈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정말 이런 걸 방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집행률을 좀 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준 돈으로 다 집행한 걸로 하고 실제로는 집행 안 되고 이렇게 자료가 좀 엉성하고 엉망이다 보고 또 집행 안 되는 예산도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면 진짜 교육부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거 개선하실 겁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쨌든 각 실국별로, 사업별로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 20.79% 지키는 문제도 그렇고 저도 서울시 의원 할 때도 일반행정에서는 매년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정말 하루하루 영업사원 영업하듯이 정말 쫓아다니고 촘촘하게 보고하고 불용 이런 걸 안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교육부는 20.79%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돈 내려보내 주니까 열심히 안 하는, 이 빈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요. 그래서 타 부처에서 이런 공격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중앙취업지원센터 관련된 거 간단히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 상영)

시간 없으니까, 윤남노 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부산 정보과학고 출신이고 중앙취업지원센터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부산정보과학고 나온 분이…… 아마 여기 홍보 영상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 취업 뭘 만들어 주는 텐데 예산이 지금 계속 깎이고 있어요, 22억에서 20억, 18억. 그리고 일자리 발굴·연계 안내 건수는 계속 늘고 있고 취업 연계도 잘하고 있고 또 업무협약(MOU) 체결 등등, 그런데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장관님, 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매우 만족도가 높고 잘 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게 18억에서 16억으로 또 10% 주는데 공공기관 운영예산 10% 절감 노력에 따라서 일괄해서 일단은 그렇게 적용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위원** 참 무식한 방식이지요, 무조건 일괄해서 10% 감액하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지켜 내고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해서 전체 10%를 맞추더라도 각 사안별

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실제로 일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은 다시 필요하지 않은 곳을 줄여서라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회에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김준혁입니다.

장관님이 아마 세부내역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아까 발언하신 이난영 국장님, 국장님 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크게 종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큰 종류.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외국인 유학생 작년 기준으로 약 25만 명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우즈벡……

○**김준혁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부 초청, 그러니까 초청 장학생이 있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오는 유학생, 크게 보면 두 종류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맞습니다. GKS 정부 초청 장학생 사업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자비 유학으로 들어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GKS 장학생으로 초청된 장학생의 이탈률 비율하고 자발적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의 비율, 유학하다가 중도 포기하는 비율 차이는 어떻습니까?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GKS 장학생 담당은 국립국제교육원이라 정확한 중도 탈락률은 모르는데요. 굉장히 중도 탈락률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없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김준혁 위원** 제가 어제 전체회의에서, 아주대학교 GKS 학생들하고 간담회 제가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더 늘려 달라고 하지 중간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 측면에서 GKS는 이탈률이 거의 없고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공부하고 나서 자국으로 돌아가서 어찌 보면 친한 인사로 성장하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그 나라의 발전 연대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런데 자발적 유학생들 같은 경우가 진짜 공부를 하러 오는 유학생들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사실입니다.

○**김준혁 위원** 과거 우리도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과거 대한민국의 주요 대학들에 대한 인정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반 사립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좀 더 늘려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정부 쪽 입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핑계로 대고 들어왔지만 실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율 조절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 거지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그렇습니다.

○**김준혁 위원** 하여튼 이거를 먼저 좀 명확히 하고, GKS 이탈률이 없다는 것을 교육부가 내용을 제대로 국제교육원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저는 그 관련된 성과를 차분하게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예.

○**김준혁 위원** 이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올해 2월에 경기도 부천에서 유치원 교사가 독감에 걸려서 대체인력이 없이 출퇴근 강요당하다가 끝내 사망한 사건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준혁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유치원 교사가 일신상에 문제가 돼서 수업이 어려울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을 구축하셨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김준혁 위원**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유보통합 이야기하는데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신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인력과 관련된 시스템이 말은 구축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체교사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는 거지요.

2025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체교사 관련해서 대전은 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대체 비율이 60%밖에 안 되느냐. 이게 예산상의 부족이나 아니면 시스템의 부족이나 아니면 교육부 정책 의지의 부족이나,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실제로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

○**김준혁 위원** 그것은 있습니다, 광주 85%고 대전은 60%고.

○**교육부장관 최교진** 대전이 제일 낮기는 한데요. 정확하게 한 가지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시는 것…… 그러면 앞으로 2026년 이후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한 문제를 더 강하게 추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래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준혁 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아야 돼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김준혁 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선 위원** 장관님, 지방에 있는 지역 소멸과 대학 위기에 대해서 정부가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거점대학을 육성해야 되고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해야 되는 부분 또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을 확대하는 부분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예산자료에 보면……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산을 가만히 보니까 국립대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소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데요. 이 사업비를 보면, 제일 위에 보면 확충 사업이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확충 사업의 집행률이 43%고 보면 전체적으로 59%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간에 지금 정부에서 주는 BTL 사업은 95%라고요. 이것은 민간이 들어온 BTL은 집행률이 높고 정부, 대학에서 집행하는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해하시지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인선 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참, 민간하고 대학에서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보니까 지금 이런 이월액들도 보면 2023년부터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이월액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사업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권역별로 충남대·전남대·경북대·부산대 이런 대학들이 사업비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 보면, 물론 밑에 전북대·강원대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했는데 그 자체로 보면 그야말로 이 사업의 집행률이 제로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체 사업 누적 실행률은 6.6%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습니다. 6.6%인데 실제로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역시 제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가 있을 텐데…… 이유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면 개별 사업의 집행 부진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글썄, 이렇게 수백억의 국비가 대학에 장기간 묶여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언론은 ‘대학에서 이자 사업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난 것을 봤습니다.

장관님, 결국 보면 사업을 많이 따오는 것이 성과가 아니라 받은 예산을 실제로 집행해서 교육·연구 성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성과라고 보시지요?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이인선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립대학을 우리가 지원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수천억이 이월이다, 낮은 집행률을 보면 국민들

이 봤을 때 과연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속 가능하게 국립대만 육성하는 게 맞냐는 의구심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낮은 집행률일 때는 반드시 총체적인, 전체적인 집행 세부내역을 좀 보면서 이런 예산 사업 내지는 시설 사업, 시설 사업은 나름의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시스템 점검을 한번 하시고 신규 재정을 지원할 때는 감점을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조금 제한해야지 교육부가 계속 질타받는 것에서 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장관님,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이인선 위원** 특구 시범사업이면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간 7600억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특별교부금을 7개 광역지자체와 94개 기초단체에다 지금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률상 근거가 없지요?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근거를 만들고 교육혁신선도지역사업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인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에 3년이나 이렇게 7600억이 나갔는데 이것을 반드시 법률적으로 만들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시범사업 이름으로 이런 근거 없이 자꾸 나가면 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하고 성과가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구 사업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 누구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장님은 이 세부내역하고 집행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시기보다는 저희 의원실로 와서, 전체적으로 3년간 왔는데 법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설명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교원교육자치지원관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인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지금 교육교부금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뜨겁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여전히 무척이나 많이 있다. 한 절반가량인 겁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을 현재 있는 교부금 액수만으로는 다 감당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그것을 단계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도 세우고는 했었는데도 이게 턱이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기재부 산식으로 가든 교육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남아 있는 그 교부금 안에서 연간 단위로 몇 개 학교씩을 개선해 갈 건지에 대한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 언제까지 계속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제는 1개씩 1개씩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과의 기준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선생님들은 시험을 봐야 되고 특정 학과를 나오셔야 되는데 어린이집은 그렇지 않다 보니. 그러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 입장에서는 유치원 수준에 아이를 보내는 것으로 이제는 문화가 아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향 평준은 안 될 것 같고 상향 평준을 하려면 시험체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연봉체계를 유치원 선생님들만큼 올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고민정 위원** 유치원 선생님들의 연봉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6세·7세 그 밑으로 아이들을 선생님한테 맡기는 부모들은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사고·판단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기도 잘해 주시고 보육도 잘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지금의 체계는 그냥 보육에만 더 많이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체계도 연봉체계도 예전 방식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교육·보육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 개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될 거다. 그러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들 그다음에 대학과 평생에 많이 투자하겠다는 방침들을 세우고 계신데 영유아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연봉 체계들을 바꿔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려면 시험체계도 바뀌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이것을 연차별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방에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해 주실 거지요,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국교위에서 어저께 일단 분과에서 일차적으로 한 안을 저희들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실을 반영해서 저희의 생각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아주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교육부가 포함되어 있는 게 부트캠프입니다. 이게 보니까 AI 등 첨단 분야의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23년부터 쪽 투자를 해서 해 왔는데 25년에는 682억 정도였는데 26년에 한 2배가량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넣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성과는 어떤가 하고 봤는데 성과를 우리가 지금 받아 보기에는 기간이 좀 짧았던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했었던 것의 성과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 닦달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현재 나와 있는, 23년도에 우리가 부트캠프로 해서 이 학생들의 성과가 어떤가를 봤는데 그냥 일반 대학 졸업자들의 평균 취업률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높아져야 정부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효능감을 좀 느낄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대학생은 부트캠프라면 '쉬웠음 청년'에 해당되는 것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26년에 283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학생들

이 일할 수 있는 의욕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여기는 더 추가가 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대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점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과지표에 보면 일할 의욕을 되찾아 줬는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 없다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것도 성과지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챙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아 위원** 저……

○**위원장 김희정** 백승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일단 3분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이 많다고는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 시설 수와 비율 모두 늘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만은 아니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지 않은 교육부의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정부 교육발전특구인데요. 지금 교육발전특구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는 시범사업이었는데 24년부터 26년까지 지역현안특별교부금에서만 763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장관님, 지역현안특교 주로 어디에 쓰던 돈입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지역 학교에서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을 때 대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특교 형식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백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학교 신증축 또 노후 시설 개선에 쓰던 돈인데요. 실제로 20년부터 23년까지 지역현안특교 92% 또는 96%까지 학교 시설 신증축 개선에 쓰였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특구가 시작된 2024년에는 54%까지 떨어졌습니다. 노후 학교는 늘어나는데 학교 시설에 쓰던 재원을 다른 사업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현안특교는 장관님 말씀처럼 보통교부금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운 지역의 특별한 교육 수요에 쓰는 돈인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들여다보면 이미 기존 재정 수요에 반영되는 늘봄, 방과후학교 또 국가시책특교로 추진하던 유보통합, IB, 자공고, 심지어는 국고사업이었던 에듀테크 소프트웨어 지원까지 들어갔습니다. 특교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썼다는 말씀인데요.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 배분 기준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은 게요 부산과 대구는 300억, 202억 신청해서 전액 다 받았고요 제주 100억 신청해서 66억만 받았

습니다. 어디는 전액 주고 어디는 삭감인지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고 인구를 고려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직접 지정하고 운영한 국가시책사업 아납니까? 교육부가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학교 시설에 쓰던 지역현안특교 쓸 게 아니라 국가시책특교를 썼어야지요. 결국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에 예산을 더 얹어 주기 위해서 지역현안특교 편법으로 활용하면서 학교 시설에 써야 될 재원을 줄이고 또 중복 사업, 자의적 배분 논란까지 자초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사업 특성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함께 신청하게 돼서……

○**백승아 위원** 아니요,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현안특교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교부금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재정이 넘친다, 방만하다,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 수천억의 특교를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교육재정이 방만하다는 이 비판은 교육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록 전 정부 사업이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편법적인 재정운용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 주시고요.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 개편 과정에서 중복 사업이 있는지 이런 교부 기준 점검하시고 지역 현안, 국가시책사업 현안 이런 것들 특교사업 목적에 맞게 쓰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그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도 아까 존경하는 이인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섯 분이냐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서 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백승아 위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백승아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셨습니까?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희정**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12시 다 돼 가는데.

잠깐 저 의사진행발언 하나……

○**위원장 김희정** 예, 박범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범계 위원** 제가 위원장님 스타일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잘하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따지면 개입 신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하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죽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진행하면서. 그래서 개입 신문을 하시려면 그냥 단건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은 위원들 질의의 빛을 가리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 하시려고 그러지요?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7분 하니까 위원장님도…… 5분 했던가?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고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정 박범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타 위원회 관례와 그동안의 국회 생활에 비추어서 과하지 않게 하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다른 위원님들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답변을 듣는 과정 중에서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드렸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장관님하고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왔고, 그런데 인식을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정부 측 대표로 그 자리에 두 차례 앉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 모든 책임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부처의 대표로서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대학 관련해서 어떤 대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내용을 물었다면 저는 주무 부처 장관이 잘 알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로벌대학의 사업 목표에 대해서 장관님이 듣자마자 바로 차관에게 넘기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대학 관계자와 지역대학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어떤 사인을 받게 되느냐 하면 ‘아, 교육부장관은 글로벌대학이나 비수도권 대학 사업에 관심이 없구나’라는 사인을 주게 됩니다.

더군다나 장관님은 지방에서 교육감을 상당 기간 지내신 분인데 지방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사업의 구체적인 디테일을 묻은 것도 아니고 사업의 목표를 묻는데 바로 차관한테 토스하려고 한다? 다른 위원님들은 그것 납득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부 측에서도 있어 봤던 부분으로서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테일 관련해서는 차관이나 주무 국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물론 질의하시는 해당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누구나 아는 사업에 관련해서 큰 틀의 목표를 묻는 것조차 답을 못 하는 이런 태도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중에 마이크 넘긴다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담당 직원이 일어나서 마이크 잡고 들어왔습니다. 누구한테 마이크 넘겨받았어요?

○교육부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정 국회의원들도 저한테 지명받고 답변합니다. 더군다나 해당 위원의 질의시간을 까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처가 그동안 국회를 어떻게 대해 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위원장님! 책임 있게, 적어도 국민들이 잘 알 만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장 차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음으로 위원장님 관련해서도 또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백승아 위원님께서 국민참여위원회 얘기를 할 때 역시 이 부분도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지, 부족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하는데 ‘책무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잘 못 했다. 소 왓(So what)? 너 어쩔 건데?’ 거의 이런 태도로 답변하셨어요. 저만 그렇게 들은 것 아닙니다. 백승아 위원님이 여당 위원이시고 하니까 굉장히 점잖게 또 교육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 그것도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 차례에 걸쳐 가지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개선의 의지를 밝힐까 했더니 ‘이미 내가 들어온 다음에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질의 하세요?’라고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태도를 말씀드리는데, 수장으로서 미루지 말고 책임 있게 답변해 달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자시니까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과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그리고 지적하신 위원님들 앞에 죄송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한 것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게 질문하시는 분의 의도인데 그냥 거의 보면 질문하시는데 뻔뻔하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 충분히 드리는 보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이 분위기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답변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제 개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부금 관련해서 몇 분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확실하게 대답은 안 했으나 상당히, 언론에 나오는 게 오보가 아닌 듯한 대답을 오늘 장관님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교육계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육위원님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현재 나오는 뉴스는 교육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고 진행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식 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지, 연동률을 끝까지 지키는 데 변화가 있는 건지 이 둘 중에서도 방향이 전혀 안 잡혔습니까, 장관님?

○**교육부장관 최교진** 산식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어느 것이 더 변동성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많이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다들 염려하고 교육계에서 특히 염려하는 내국세 20.79%라고 하는 기준선을 또 어떻게 지켜 나가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같이 함께, 서로 양보하기도 하고 서로 뜻을 모아 가기도 하면서 두 가지 다 지켜지는 그런 안을 거의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용상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지 20.79%라는 연동률을 포기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교진** 그것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부의, 교육계의 주장과 기획예산처의 주장이 온전히, 완전히 타결이 안 돼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장관님 입장에서 새로운 산식을 만드는 안과 요율을 지키는

안 중에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은 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교육부는 처음부터 20.79%라고 하는 기준선을 지키는 선에서 초과세수가 있을 때 그 초과세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계의 다른,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고등교육이나 영유아교육이나 AI 교육이나 이런 새로운 곳에 쓸 수 있도록 미래인재기금으로 하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크게 이견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지금 말씀을 혼재해서 쓰고 계시는데요. 새로 도입될 산식을 바란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무조건 연동률을 원한다는 겁니까? A와 B가 동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일단 교육부의 입장은 연동률을 지키는 선에서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일정하게 캡을 씌우는 것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내국세가 추가세수가 생기는 연도만 있는 게 아니라 부족한 세수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틀을 만드는 거라 특수 상황에서의, 올해·내년 정도만 생각하면 안 되고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교육부가 이 자리에서 ‘연동률 산정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지켜질까 말까 한데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 보면 ‘아, 실질적으로 그것은 지킵니다만 거의 새로운 산식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러면 교육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되겠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그러면 추가해서, 아직 신설되지 않은 미래대응기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아까 안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 기금 관련해서 만약에 기금을 마련할 경우에 주무 부처는 어디가 됩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기금 전체는 아마 기획예산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중에서 영역별로 할 때 교육 관련 분과를 나누게 되면 교육 분과의 예산은 교육부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 일정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주무 부처가 교육부가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교육부장관 최고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지금 답변 들어 보면 거의 새로운 산식 도입하고 기금도 만드는데 교육부가 가지고 올지에 대한 자신 없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과정 함께해야 될 게 있으면 국회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고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인선 위원님, 한병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정성국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 그리고 저 김희정 포함해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도 있고 방금 여당 간사님이 질의시간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 제가 여당 소속 다른 위원장 대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면서 제 사회권은 제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민정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돼 가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김희정** 예, 말씀하십시오.

○**고민정 위원** 상임위마다 운영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상임위에서는 사실 위원장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그런데 또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박범계 위원님이 그러면 시간을 똑같이 카운팅을 하자 했는데 안 돌아가고 있는 것만 제가 지적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중요한 질문을 해 주고 계셔서 그냥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향후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또 있을 수 있으니 아예 그냥 짧게 해 주시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그냥 시간을 카운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결정은 어차피 위원장께서 하실 거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오늘 질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산소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상정을 시키는 것은 하고는 있지만 결국 법안소위와 예결산소위 그다음에 청원소위까지 소위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핵심은 그겁니다. 예전에는 비교섭 위원님이 한 분밖에 안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21대가 됐든 지난 전반기가 됐든 늘상 비교섭 위원님에 대한 존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소수정당에 대한. 그래서 대체로는 법안소위도 들어가고 예결소위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보면 청원소위까지 3개를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비교섭 위원님이 지금 두 분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소위를 두 분 다 하고 싶으시지요, 당연히. 한 분께서는 이제 막 새로 시작하셨으니 경험해 보시고 싶은 거고 또 한 분께서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지난 전반기에 이어서 계속 교육위 법안을 만지고 계신 분이셔서.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비교섭으로 계신 분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이 두 분 위원님이 동시에 다 들어오는 것이 맞다. 그것이 국회가 지금까지 지켜 왔던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협치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협상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산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채로 오늘 저희가 질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끝까지 이인선 간사님하고 이게 합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인선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선 위원** 아마 오늘 여러 가지로 보셨겠지만 사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면 질의가 조금 소수의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결산 심사를 앞두고 소위 구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법안소위원장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법안소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두 비교섭단체가 다 가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여당이 소수 야당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 주면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방망이를 쥐고 있는 법안소위원장을 가져가시면 나머지 동수로 가도 별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두 분이 다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3·3·2로 하든 4·3·2로 하든 그렇게 동수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아무튼 소위 구성에 좀 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주시고 저도 또 같이 고민하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두 분 간사님께서 열심히 상의를 하셔서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이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 전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좀 협상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소위원회가 현재 3개 정도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특정 소위에만 많이 몰리지 않고 골고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양당의 간사가 있기 때문에 양당에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상은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원장과 그리고 법안소위원장이 같이 가는 위원회가 많은데 아마 그것은 이인선 간사님께서 양보하시겠다는 말씀이니……

○고민정 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또 양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활하게 합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저 한 번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정 예, 그러세요.

○고민정 위원 이제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자꾸 길어지는데요. 위원장하고 법안소위원장이 다 같이 가지 않습니다. 국방위 같은 경우도 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간사가 있는 이유는 매번 새롭게 원이 구성이 되면 협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곳과 비교해서 할 거면…… 원래는 원칙대로 하면요 위원장도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저희가 더 다수니까요. 그러나 여야 간의 협치의 결과물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상임위는 같이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상하게 다르게 가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늘상 위원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원내 간의 협상의 결과물이어서 어쩔 때는 민주당이 하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이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만 법안소위원장은 매번 다수당이 해 왔었다는 점은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김희정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정성국 위원 예.

○위원장 김희정 정성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국 위원 충분히 의견이 나눌 수 있고 또 협상이 더 필요하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위원장 몫을 민주당이 가져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까지 확대를 해 버리시면……

○고민정 위원 그 얘기는 저희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저쪽이 하신 거지……

○정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표현보다는…… 그러면 21대 국회 때는 왜, 그 전까지는 왜 그러면 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례가 있었잖아요. 왜 교육위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또 확대시켜 버리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풀리지 않는 이 현안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서로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간사님, 당사자인 제가 듣기에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고민정 위원 어떤 게요.

○위원장 김희정 저 국회본회의에서 선출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어야 된다는 발언……

○고민정 위원 마치 법안소위원장을 욕심내서 가져온 것처럼……

○위원장 김희정 아니, 지금 마이크 드릴 테니까 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마치 욕심내서 법안소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제가 그 말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다른 상임위 위원장과 법안소위가 그렇게 간다 하고 말씀을, 원칙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길래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아까 이인선 위원님이 그 말씀도 하셨어요. 만약에 비교섭 2명이 들어오게 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로 3:3으로 가자, 그것은 됩니까?

○김준혁 위원 저……

○위원장 김희정 위원님, 마무리하시고요. 또.

○김준혁 위원 오늘……

○고민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냥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고민정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또 김준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보통은 한 분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냥 각자 의견을 하고 그냥 끝내는 게 통상인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유감스럽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사감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김준혁 위원님.

○김준혁 위원 오늘은 결산과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다 나와 있는 데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정 예.

○강경숙 위원 저도 아주 짧게…… 시간 짧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희정 예, 강경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경숙 위원 제가 비교섭단체 당사자여서 그냥 좀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으로 있기는 했지만 이주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각각의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비교집단체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들께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정 이주영 위원님.

○이주영 위원 저도 비교집단체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당 간사님들께서 아마 지혜롭게 결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께 특별히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거나 일부러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원칙을 정하거나 할 때 이것이 어느 특정 집단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소수당이 됐건 과대대표되지 않는 것이 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큼 중요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나 모든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민주적이지만 또 다수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성의 비례성에 대해서 위원회들이 지켜 왔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원칙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원회의 운영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도 위원장님께서 지혜롭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정 오늘 말씀하신 분들 충분히 말씀하셨고 양당 간사님께서 이 모든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는 이렇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분야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 이렇게 나누거나 교육·문화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안소위를 여러 개 만드는 위원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분야에 상관없이 한쪽은 법안, 한쪽은 예산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 위원장과 세트로 가져가는 경우, 다수당이 가져가는 경우 여러 가지 방식을 놓고 합의와 협의에 의해서 도출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얘기할 수 있는 논리는 어느 쪽이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두 분 간사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늦지 않도록, 우리의 의견이 정부 결산안 심사하는 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연례적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전용에 대한 개선 필요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요. 행복기숙사 사업 확대와 관리 강화 필요 또 국립대학 시설 확충 사업,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 사업 등 교육부 및 교육청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 그리고 사립대학 구조개선 관련 사학진흥재단의 역할 강화 필요 등 교육부에 대해서는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여율 저조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25회계연도 결산은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해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서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님,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강경숙 고민정 김문수 김준혁 김희정 박범계 박정훈 백승아 이인선 이주영
정성국 한병도

○청가 위원(2인)

안규백 윤호중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신문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장관 최교진

차관 최은옥

기획조정실장 설세훈

고등평생정책실장 이해숙

학교정책실장 장홍재

인공지능인재지원국장 이윤홍

학생지원국장 노진영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 심민철

영유아정책국장 강민규

대변인 정병익

감사관직무대리 홍수영

정책기획관 김홍순

국제교육기획관 이난영

대학정책관 송근현

대학지원관 이주희

평생교육지원관 예혜란

의대교육지원관 장미란

학교정책관 김영진

학교지원관 유지완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이강복

영유아지원관 김정연

운영지원과장 강정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상임위원 이광호

상임위원 김경희

사무처장 최수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
편사부장 한공희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김선미
중앙교육연수원
원장 이영찬
정책연수과장 남점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박준성
국립국제교육원
원장 한상신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사무국장 강병구
총무과장 김대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송하중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하운
경영총괄본부장 서명석

국립사회의박물관